

‘투트랙’ 결렬 ... 결국 준예산 사태 맞나

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 여야는 30일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으나 소용없었다. 처음부터 예견된 것처럼 여야는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. 어느 한쪽의 전격적인 양보가 없는 한 여당 단독 처리 아니면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상황이다.

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예결위위원장은 이날 수 차례 만나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. 4대강 사업에 따라 설 치되는 보의 높이와 개수, 준설량 등 핵심쟁 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'4대강 국민위 원회' 구성 시기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렸다.

일방예산 협상의 경우도 국회 예결위 한나 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이 시종 의원이 전날 밤부터 협상을 통해 민주당 이 요구하는 복지·교육예산 증액 문제에 대 해 절충을 시도했지만 매듭짓지 못했다.

이처럼 ‘투트랙 협상’이 파국을 향해 치달 으면서 여야가 31일까지 예산협상의 돌파구 를 찾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. 실제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“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”면서 “약속한 대로 내일까지는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, 끝 내 합의가 안 되면 도리없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” 고 단독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.

그는 오후 의총에서도 “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”고 강조했다.

원내대표 측은 특히 이날 오전 소속 의원 전원에게 “오늘 밤샘 준비를 하고 오라”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만 일의 사태에 대비했다.

한나라당은 또 이날 오후 두 차례 비공개

예산안 오늘 ‘강행’ ‘저지’ 격돌 불가피 파국 부담 커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

의원총회를 갖고 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 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.

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 자간담회에서 “일방예산 협상은 더 이상 협 상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판단되며, 4대 강 예산은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답변을 주 겠다고 해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”면서

“그러나 현재로서는 견해차가 너무 커 의견 합치를 보기가 사실상 어렵다”고 말했다.

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을 예결위 회의 장으로 집결시킨 것은 물론 한나라당이 예 결위 회의를 제3의 장소로 옮길 것에 대비 해 별도 기동조도 편성했다.

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준예산 편성 못지

않게 예산안 단독처리 및 저지에 따른 정치 적 부담이 커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. 여야 지도부는 31일까 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는 채 끝까지 절충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.

한편, 김형오 국회의장이 30일 여야의 예 산협상 타결과 연내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면 서 이틀째 본회의장 국회의장직을 지켰다.

김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71 건을 처리한 뒤 “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조 그마한 각오를 말하겠다”며 의장직 지키기 에 들어갔다. /박지경기자 jkpark@



4대강 예산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간의 전선이 감도는 가운데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가 한나 라당 안상수 원내대표,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. /연합뉴스

복수노조 2011년 7월 시행

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 한노위 추미애 중재안 수용

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관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30일 진통 끝에 국 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.

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과 한나라당이 합작으로 이날 야당 의원들 을 전원 배제한 채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강 행처리, 법제사법위로 넘긴 것.

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상황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,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환경노동위 전체 회의장에서 전원 강제 퇴거시킨 채, 한나라 당 소속 한노위원들만으로 개정안을 재서 9 인 중 8인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.

이에 회의장 바깥에 있던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 문을 두드리며 “한노위원이 회의장 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”, “날치기하 지마라”며 강력 반발했다.

그러나 추 위원장은 3분 만에 일사천리로 노동관계법을 처리한 뒤, “이 순간까지 많은 산통을 겪었다”며 “그럼에도 저는 제게 주 어진 소임과 책무, 고달픔을 이겨내면서 이

러한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 린다”고 강행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.

이날 처리된 노동관계법은 추미애 위원장 이 마련한 대안으로 ▲복수노조는 1년6개월 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허용하 고 ▲전임자 임금 지급은 금지하되 타임오프(근로시간 면제)의 범위를 ‘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노사 공동의 활동’ 으로 제한하며 ▲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 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 부터 적용토록 했다.

또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, 사용자가 동의하면 단 일화를 하지 않아도 되며 노동위원회가 현 격한 근로조건 차이, 교섭관행 고충형태 등을 감안해 분리교섭을 인정하도록 했다. 다만, 현재 조직된 산별노조의 경우 내년부 터 2년6개월 동안 창구단일화 적용 대상에 서 제외하기로 했다.

하지만, 야당은 이를 ‘추 위원장과 한나라 당의 아합’으로 규정하고 적극 저지에 나서 겠다고 밝혀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 인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 통이 예상된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李大통령 “임기중 대운하 안한다”

국토부·행안부 등 업무보고서 거듭 밝혀

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국토해 양부, 농림수산식품부, 행정안전부, 환경부 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4대강 살리기 사 업과 관련, “국회에서 4대강 사업 문제가 첨 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” 고 밝힌 뒤 “이미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, 시 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”고 강조했다.

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, 직접 ‘대 운하 연계성’ 논란에 직접 종자부를 찍겠다 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 이 에 따라, 여야의 막판 예산안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.

그러나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는 “우리가 선도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

을 통해 수질과 생태계를 확보해 경제를 성 장시킴으로써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함께 하는 모델이라고 유엔개발계획(UNEP)에 서도 발표하고 있다”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. 한편, 이 대통령은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, “내년에는 훨씬 더 높은 성장 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”이라며 “서민들도 내년 하반기에는 (경기회복을) 체감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내다봤다.

이어 이 대통령은 “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”라면서 “호주가 출구전략에 들어갔으나 미국, 유럽, 일본, 중 국 등 모두가 내년 상반기까지 비상경제체제 를 유지한다”면서 “출구전략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. /임동욱 기자 tuim@

민주 광역단체장 후보 ‘완전국민경선’ 급부상

‘통합과 혁신위’서 거론

민주당이 내부에서 광주시장 및 전남지 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를 지역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‘완전국민경선’ 방안 이 급부상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내 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과 관련, 당 내부에서는 지역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후보를 선정하는 ‘완전국민경선’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.

시민배심원제와 국민참여경선(국민 50%+당원 50%) 등도 거론되고 있으나

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민주당 바람을 불 러일으키기 위해서는 ‘완전국민경선’ 방 안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.

실제로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당헌 당 규 개정 특위에서 당내 경선에 완전국민경 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 혔고,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지난 22일 ‘모 든 유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실시하 는 당내 경선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위탁한 다’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.

이를 반영하듯, 이날 열린 민주당 통합 과 혁신위원회는 전국 시도당위원장과 연 석회의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배

심원제 도입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 지 못했다. 통합과 혁신위원회는 이날 회 의에서 광역단체장,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 과 관련, 완전국민경선, 국민참여경선, 시 민배심원제 등을 경선 방식으로 제시했 으며 지방의원 후보 선출 방식으로는 당원 경선과 시민 배심원제를 제시했다.

그러나 시도당 위원장들은 시민배심원 제 도입과 관련, 공정성 시비,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.

또한,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시민배심 원제가 도입된다면 이 같은 방식을 원하는

지역이나 정성적인 경선이 치러지기 어려 운 지역 등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.

김원기 통합과 혁신위원회 위원장도 시 민배심원제의 제한적 운용에 공감을 나타 낸 것으로 알려졌다.

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‘국민참여 경선’은 일반적인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국민적 주목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.

이에 따라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 은 ‘완전국민경선’과 ‘국민참여경선’ 가운 데 하나가 도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.

이와 관련, 김동철 광주시장위원장은 “시민배심원제를 광주광역시장 후보 경선 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”라며 “하향식 밀실 공천과 동원 경선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 야 한다”고 말했다. /임동욱 기자 tuim@

주소창에 "한빛고시학원"만 쳐보세요

2010년 국가직 9급공무원 시험 4월 10일 / 국가직 7급공무원 시험 7월 24일
전남지방직 9급 5월 22일 / 전남지방직 7급 10월 9일

압도적 1위 한빛!

7.9급 공무원 합격설명회 **12월 28일(월) 14:30 ~ 17:55**
응답권 복귀설명회 **알고 시작하면 빠르다!**

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 통하라!!

7.9급 종합반 2개월 완성 (수업료, 교재료, 기숙비, 생활비, 관리비, 등록금, 입학금, 사서대금, 기타비용 포함)

합격반까지 합격시스템 (합격반까지 합격률 100% 보장)

합격반까지 합격반개설 (합격반까지 합격률 100% 보장)

2012년까지 소망 장학금 5000원 (합격반만)

소망 장학금 (합격반만)

합격반까지 합격반개설 (합격반까지 합격률 100% 보장)

개강 1월 4일 **총합/단과반** (선착순 2개월 완성)

한빛고시학원 **광주 북구청앞**
 (전국 200여개 지점) **234-0234**